

9월부터 5세 이하 어린이 월 10만원씩 수당받는다

복지부, 189만가구 대상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아동 1명 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 가구)의 95.3%(약 189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결정된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수당은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환산액이란 총 자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 기준은 보사연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을 가져와 제안한 연 12.48%를 따랐다.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는 소득 계산 시 공제가 적용돼 혜택을 받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2015년 기준 1인당 양육비용(월 64만8000원) 등을 고려해 둘

째 자녀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씩 제하고 소득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 가구는 65만원, 세 자녀 가구는 130만원(65만원×2명)을 빼고 가구 소득이 계산돼 아동수당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맞벌이 부부는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까지 공제받는다. 다만 홀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사람 소득액이 기준이 된다.

선정기준액 적용 시 가구원 판단은 부부, 아동, 형제자매가 원칙이다. 자녀가 1명인 부

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은 감액 지급으로 막는다. 가령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166만원인 가구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1171만원을 인정받아 수당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보다 전체 월 소득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체 수당 가구의 0.06%로 추산되는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 가구에 아동 한명당 5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조사 방법을

시행규칙 등 반영 오늘 입법예고... 소득환산율 연 12.5% 적용 3인가구 월소득 1170만원 미만 등... 신청 가능 자격도 넓혀

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 총 가구 인원이 5명이라도 소득인정액 산출 때 조부모를 제외한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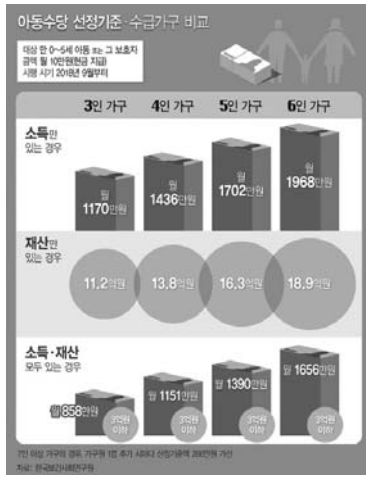
대신 한부모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조사 때 1명을 추가해 인정해 준다. 이를테면 두 자녀 한부모 가정은 3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간주돼 월 1170만원이 아니라 1436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할 때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공제액을 달리 한다. 아동 주소지 기준으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등이다. 아동수당 지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미 소득·재산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가구(▲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유·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는 조사 없이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관계기관 시스템상 공적 자료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 등)이면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한다.



〈그래픽: 뉴시스 제공〉

유추한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출생 신고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법에 따라 연초와 출생 후 며칠 이내 신청하도록 법과 시행규칙에 담았다"고 말했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청 가능 자격도 넓혔다. 친권자, 후견인 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설에 선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가능하다.

수당 지급은 9월부터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한명당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하지 못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신청 기간

을 사전에 충분히 두기로 했다.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9월30일까지만 신청하면 9월분 소득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보사연이 연 12.5%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결과 가구 기준 예상 수급률은 95.3%(아동 기준 95.6%)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산한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약 189만가구 규모다.

지역별로 예상 수급률은 서울 89.4%, 부산 95.8%, 대구 96.0%, 인천 97.2%, 광주 97.0%, 대전 96.9%, 울산 97.4%, 세종 96.5%, 경기 94.8%, 강원 98.2%, 충북 97.8%, 충남 97.7%, 전북 97.9%, 전남 98.6%, 경북 98.1%, 경남 97.9%, 제주 96.5% 등이다.

문제는 전체 가구 가운데 4.7%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다. 올초 보사연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연간 770억~1150억원 가량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향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은 국회에서 결정해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안"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9~12월 4개월분 예산으로 국비 7000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향후 지방비와 매칭해 집행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 기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靑 "선관위 유권해석 인사 기준 또 생겨"

김기식 '위법' 관련

청와대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인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만나 '오전 현안점검회의' 때 인사 프로세스 점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질문에 "그 부분은 추후 인사수석실 차원에서 진행할 일"이라면서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청와대가 존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인사)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김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했던 부분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중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가 과거 관례를 넘었다고만 했을 뿐, (적법한 범위)에 대해 숫자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며 "사회적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인사 기준 마련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인사 기준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추천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자를 알고 있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에 보도유예(엠바고)를 설정하고 외교부에서 자료가 배포됐고, 자료 배포 전에 현 오사카 총영사가 내정됐었다"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확정되고 언론에 공지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이달의 으뜸도정상 시상식 17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는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한 청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중 획이시술의 날 행사를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기획관실, 교통물류도로과, 소방행정과, 미래산업과 등 4개 과에게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

'제값 받는 농업' 실현... 함께 손잡는다

도, 올 농업·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공모 10개소 선정 생산자단체 6곳·식품기업 4곳... 임차비·물류비 지원

전북도는 17일 계약재배를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 외식기업이 농산물 재배, 공급사슬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공모를 추진해 10개소(생산자단체 6, 식품기업 4)를 선정했다.

도는 지역 농업인 생산자단체와 CI, 도이름 생형 및 오리온 등 식품기업

과 MOU를 체결하여 귀리, 보리 등 지역 농특산물 원료 약 1만5000톤을 구매 계약으로 생산자단체의 경우, 계약재배 작물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시범포 조성 및 관련 생산시설·설비 사용을 위한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 식품 외식업체의 경우, 계약재배 원료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제

품의 시장조사, 제품의 홍보 및 계약재배 농산물의 물류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년도에 황동농협과 CI 햇반이 맞춘 쌀 생산계약을 체결해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은 500ha에서 올해 1,500ha로 3배 이상 늘어나, 황동농협 뿐만 아니라 북익산농협, 삼기농협에서 생산된 쌀까지 포함해 CI 햇반용 쌀의 납품을 확대하는 성과를 보였다. /김진성 기자

정읍시, 전북투어패스 활용 토탈관광 실현 나서

정읍시가 전북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를 활용한 사계절 체류형 토탈관광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정읍시에 따르면 우선 관광객 방문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가평정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주차장 등의 현황을 파악한 후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투어패스는 정읍시를 비롯

한 전북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업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기존 가평점 관리도 강화한다. 특별할인가평점은 매월, 자유이용시설과 주차장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소의 경우 판매는 물론 구매자들에게 카스 이용법 등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에도 주력한다. 정읍시청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및 카카오톡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수막 게시 등 축제장 등에서의 길거리 홍보 등 오프라인 활동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진 '2018 정읍벚꽃축제'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연의 소중함, 축제로 인식'

20일부터 이틀간 전북도청 광장서 '그린웨이 환경축제' 전북을 빛낸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추진

전북도와 민간환경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1일 까지 전북도청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전북도내 환경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환경관련 행사나 이벤트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사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민간, 기업 참여로 열고 있다.

이번 축제는 'Remind Green'이란 주제로 64개 환경단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공식행사, 기획전시, 문화공연, 환경체험 등 6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8년 제11회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전북을

빛낸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 다채로운 이벤트를 추진한다.

오는 20일 늦은 6시 30분, 기념식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이랑 선수와 2017 K리그 우승팀인 전북현대모터스 FC 선수들의 팬사인회 및 환경토크콘서트를 비롯하여 육군제35보병사단 군악대 공연 등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기획프로그램으로는 '우리땅경기' 신정일 이사장과 함께 삼천의 생태적, 역사적 소중함을 인식하는 '가족과 함께 삼천 나들이'를 비롯한 '재활용 나눔장터', '캠버리 체험존', '그린버싱킹', '도민 정책제안, 내 마음을 들어줘' 등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진성 기자

'공명선거 실현 다짐'

전북도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발대 유권자 선거참여 활동 적극 보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명선거 실현 의지를 다지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를 기원하는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17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30여명이 참석해 법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행동강령 제정으로 시작되며, 이후 신뢰받는 예방·단속과 선거범죄 척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공정선거 기원 퍼포먼스를 펼쳤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 안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수요 중심의 선제적 예방·안내활동을 강화해 할 수 있는 사례 위주

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유권자의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무원 선거관련, 비방·허위사실 공포 등 흑색선전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도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예화된 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공정선거지원단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한옥마을 일원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쳐 불법선거 배격과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